

대한민국 2018 년 인권보고서

요약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통치체제로 하는 입헌민주주의 국가이다. 2017 년 5 월에 치러진 대선과 2016 년에 치러진 총선은 자유롭고 공정했던 것으로 간주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조기에 실시된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6 월에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지방선거를 치렀다.

문민 당국은 보안 조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

인권 현안들로는 종교적 신념 등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구금, 국가보안법 및 기타 보안 법률의 적용, 모욕죄 남용, 인터넷 사이트 차단, 부패 등이 있었다.

정부는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들을 기소했다.

제 1 절.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

a. 자의적인 생명의 박탈과 여타 불법적이거나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살인

정부나 정부 산하 기관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b. 실종

정부 당국에 의하거나 정부 당국을 대리하여 행해진 실종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법률은 이러한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고문을 주장하는 사례는 없었다. 다만, 비정부기구인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 폭력 및 가혹행위의 몇 가지 사례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군대 내 가혹행위가 적발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으나 비정부기구들은 괴롭힘이 군대 내 자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신뢰할 만한 증거에 따르면 병사들 사이에서 여전히 가혹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2015년 이래로 매년 약 600명의 인권교관을 양성하고 있었다. 또한, 국방부는 국방홍보원과 공동으로 인권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군에 배포했다.

교도소 및 구치소 실태

교도소 및 구치소 실태와 관련하여 인권 문제가 제기된 중요한 보고는 없었다.

시설 여건: 교도소와 구치소 내에서의 수감자 가혹행위나 시설 여건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는 없었다.

60 개 항공사 회원들로 구성된 항공사운영위원회는 재원과 인력을 조성하여 인천국제공항 내에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 등 국내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을 위한 ‘출국대기실’을 설치했다. 출국대기실 운영은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다.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자는 변호인을 접촉하거나 입국 불허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1~6 월에 하루 평균 132 명이 이곳을 이용했으며 49 퍼센트가 당일, 97 퍼센트가 4 일 이내에 출국했다. 출국대기실의 1 일 수용 가능 인원은 약 60 명이었다.

법무부는 출국대기실에 남녀가 구분된 대기실, 침실, 샤워실이 갖춰진 화장실, 텔레비전, 무료 와이파이, 소파, 공중전화, 정수기, 담요가 구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국제 비정부기구들은 특히 수개월 동안 장기 수용되는 대기자들의 경우 출국대기실의 생활 환경이—사생활 보장, 침대, 의료 시설이 부족하여—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기자들은 개별 항공사에 식사를 의존하고 있었다. 일부 대기자는 하루 세 끼를 패스트푸드만으로 해결했으며 식사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여 다른 대기자나 변호인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었다.

행정: 법무부에 따르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수감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구제 절차들이 시행되고 있었다. 수감자는 법무장관에게 직접 청원하거나 법무부 산하 인권침해신고센터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혹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6 월을 기준으로 32 건의 직권남용 관련 청원이 법무장관 앞으로 접수된 상태였다. 이 중 28 건은 대면 조사와 서면 조사를 병행하여 종결된

상태였으며, 9 월을 기준으로 4 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을 시사하는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독립적인 감시: 교도소 시설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신고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d.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자의적 체포와 구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 요건을 준수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의도된 행위를 한 자를 구금·체포·수감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국내외 비정부기구들은 금지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며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시민을 위협하고 구금하는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국보법의 철폐 혹은 개정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경찰 및 보안기관의 역할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 경찰청은 국내 치안을 담당한다.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 및 국경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문민 정부는 보안 조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정부는 직권남용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효과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다. 당해 연도 중에 보안 조직이 관련된 면책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NIS)은 국가 안보 및 체제 전복과 관련된 범죄나 범행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정보원의 포괄적인 권한과 비밀주의가 부실한 감독 체계와 맞물리면서 국정원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수사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체포 절차 및 피구금자 처우

현행범인 경우, 또는 영장 발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속한 체포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구금·압수·수색은 법에 의해 영장이 요구된다. 이 경우 담당 검사 또는 경찰관은 피의자 체포 직후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당국은 자진 출두한 자를 경찰서에서 6 시간 이상 심문할 수 없다. 당국은 구속 후 20 일 이내에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구금을 10 일 연장할 수 있다.

보석 제도가 있다. 인권변호사들에 따르면, 당국은 중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도주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 여겨지는 자, 혹은 주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 심문 등의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권이 거부되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변호인 접견에는 제한이 없지만 변호인이 심문을 방해하거나 심문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호인의 심문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재판 기간 중 그리고 특정한 상황하에서 공판 전 기간 중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구금자는 정부에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다.

구금 기간 중 가족 면회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랐다.

자의적 체포: 법무부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국가보안법에 따라 28명이 체포됐고 그 중 9명이 기소되었다고 보고했다.

4월에 서울고등법원은 이진영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사회주의 운동에 관련된 도서를 파일 형태로 수집하고 인터넷상에 유포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7년 1월에 체포된 바 있다. 유포된 도서에는 북한에서 발간된 소설과 북한의 주체사상에 관한 서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e.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률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존중했다.

재판 절차

헌법은 공정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사법부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시행하고 있다. 법률은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필요한 경우 통역을 제공받아 구속 이유를 즉시 통보받을 권리, 변호사 접견권(필요한 경우 국비 지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정 출석권, 항소권 등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변호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제공된다. 피고인에게는 소급 금지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보장되나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피의자는 구속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재판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판사가 방청인이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배심원 재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의 경우 판사는 본인과 협의의 통해 도출된 법적 효력을 갖는 배심원 평결에 동의할 수 있다. 배심원 재판은 반드시 피고의 사전 신청을 필요로 한다.

판사는 검찰과 피고 양측 증인에 대해 교호신문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유죄라고 진술하거나 자백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수 있다.

정치범 및 피구금자

법무부는 현재 단지 정치적인 신념만을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양심적 병역거부, 쟁의행위를 이유로 체포된 시민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당해 연도 중에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약 120 명이 수감됐다고 보고했다. 여호와의증인 측은 10 월을 기준으로 신도 117 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18 개월형을 살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들 수감자는 접견이 허용됐다.

6 월에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부인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전의 결정을 뒤집어 병역법 제 5 조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주문했다. 11 월에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하고 11 월 말에 58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석방했다.

민사 사법 절차 및 구제 제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사 절차가 갖춰져 있었으며, 국내 법원 명령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시민은 법원에 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과 단체는 국내 인권 기관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본인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잘못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사법적 구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f.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침해

그러한 침해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준수했다. 법으로 정부가 범죄수사의 경우 최장 2 개월, 국가안보 관련 사안의 경우 최장 4 개월간 전화, 우편 및 기타 통신 수단을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받은 자로 하여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7 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3 개월 간격으로 주요활동사항, 여행계획, 가족관계, 직업, 재산 상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보법은 가정 내 북한 라디오 청취 또는 북한 서적을 읽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본 금지규정의 집행 사례는 드물었으며 가정에서 북한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합법이다.

국회의원과 비정부기구들은 2016년 테러방지법이 국가정보원의 감청 및 개인정보 수집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9월에 당국은 2014년에 침몰한 세월호와 관련하여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한 혐의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구속했다. 군 특별수사단은 부대원 60명을 동원하여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사찰한 혐의로 소 참모장을 기소했다. 세월호 TF는 대통령의 대외 이미지를 유리하게 조성할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와 같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 2 절. 시민적 자유의 존중

a.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 헌법 제 21 조 제 4 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선거법, 형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에 제약을 가했다.

표현의 자유: 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에 입각하여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촉진하거나 선동하는 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당해 연도 중에도 북한을 고무하거나 찬양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명예훼손죄, 국가보안법, 기타 법률을 예로 들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해 연도 중에 정부 당국이 탈북자들을 접촉하여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 외에도 정부 당국이 탈북자들을 접촉하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는 대외 행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됐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사실로 간주하는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 독립적인 언론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위에 언급된 제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관점을 표현했다.

1 월에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퇴진과 함께 KBS 기자들의 파업이 종료되었다. 공영방송인 KBS 와 문화방송(MBC)의 기자 3 천 명 이상이 독립적인 편집권 침해와 경영진의 보도 통제에 항의하여 2017 년 9 월에 파업을 시작했다. MBC 파업은 2017 년 11 월에 MBC 사장이 물러나면서 중단되었다.

10 월 중순에 통일부는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의 판문점 남북 장관급회담 취재를 불허했다. 통일부는 김 기자의 “활발한 보도 활동이” 미칠 영향과 안전상의 우려를 “특수한 상황”으로 언급했다.

검열 혹은 내용 제한: 여성가족부는 대중가요의 가사를 심의할 수 있으며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금지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과 인터넷 통신의 윤리 규정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명예훼손죄/모욕죄: 정부와 공인들은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동시에 범죄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이용하여 공론을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위협하거나 검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동법은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거짓 사실을 드러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역시 처벌을 받는다.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다. 수원지검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를 조사했다. 경찰은 이 지사의 아내가 2016년 12월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남편의 경쟁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지지하거나 국가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민을 체포하고 수감하거나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정당을 해산하는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에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자 언론의 북한과 관련한 긍정적인 보도에 대한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는 감소한 것으로 보였다. 일례로, 12월에 유명 KBS 심야 토크쇼 ‘오늘밤 김제동’에서 방영한 인터뷰에서 친 김정은 단체의 대표인 김수근 씨가 김정은을 “능력과 실력이 있는” 지도자라고 칭송한 적이 있었다. 다수의 보수 성향 국회의원들이 이 방송을 내보낸 KBS를 비난했지만 연말을 기준으로 인터뷰 관계자가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은 사실은 전무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은 2010년에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댓글을 올리고 컴퓨터에 이적 표현물을 저장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12월 27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의 자유

정부는 인터넷 접근을 일부 제한했으며 법률에 따른 포괄적인 권한을 근거로 이메일과 인터넷 대화방을 감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월부터 9월까지 14만 3681개 웹사이트를 차단했다. 접속이 차단된 웹사이트는 음란물이나 도박에 관련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유튜브 채널과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상당수 북한 체제 선전 사이트를 포함하여 8,063개 사이트는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차단됐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행위는 적법하지만 해당 사이트로의 링크를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접속이 차단된 웹사이트 중에는 장기·식품·의약품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위반하거나 자살을 조장하는 웹사이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혹은 채팅방에 게시된 글에 불법·유해 정보로 규정된 콘텐츠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금지된 게시물이 발견된 경우 정부는 사용자에게 경고할 권한이 있다. 금지된 콘텐츠가 삭제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계정이 차단될 수 있다.

대형 웹사이트에 온라인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가명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은 다가오는 선거에 관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릴 때 실명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언론이 전반적으로 자유롭고 경쟁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의하면, 2017년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95퍼센트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다.

학문의 자유 및 문화 행사

교사에게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정치활동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언론은 국가정보원이 2017년 9월에 정부에 비판적인 가수와 배우가 열거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2008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반정부 성향의 문화 인사들을 정치적으로 격리시키고 재갈을 물리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관계자와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했다.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공공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정치 집회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시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법에 의거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최측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았거나 과거 폭력 시위 경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일부 시위를 금지했다. 경찰청은 당해 연도 11월까지 6개 집회에 참가한 시위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파손했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은 10월까지 총 9건의 집회를 불허했다고 확인했으며 이는 2016년도의 96건, 2017년도의 74건에 비해 90 퍼센트 이상 감소한 수치였다.

8월에 경찰청은 2015년 집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수개월 동안 혼수상태에 빠진 고령의 시위자 백남기 씨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2016년에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경찰관 2명은 6월에 벌금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비롯한 비난 여론에 대응하여 2017년 6월에 경찰청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향후 차벽이나 물대포의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c. 종교의 자유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www.state.gov/religiousfreedomreport/) 참조.

d. 이동의 자유

국내 이동의 자유, 국외 여행(북한 제외), 이민, 송환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정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 및 기타 인도주의 기구들과 제한적 협력을 통해 국내 실향민, 난민, 복귀 난민,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기타 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원했다.

이주자, 난민, 무국적자에 대한 가혹행위: 현지 비정부기구들은 신체적 가혹행위, 여권 압수, 열악한 주거 환경, 성희롱 등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행해진 가혹행위 사례들을 보고했다. 1 월에는 경기도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출신 여성 1 명이 고용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농촌 지역 여성 이주노동자의 12.4 퍼센트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여행: 방북을 원하는 시민은 통일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방북 희망자는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정부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난민 보호

망명에 대한 접근성: 망명 허용 또는 난민 지위 부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에게 별도의 법률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난민 또는 망명 통계에 탈북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법률에 의해 시민권이 부여되는 탈북자 혹은 북한난민을 수용하는 오랜 전통을 유지했다. 당해 연도 9월까지 한국은 탈북자 808 명의 입국을 허용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탈북자 1,127 명의 재정착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는 2002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난민 수속을 전담하는 사무소와 인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했다. 정부는 난민신청자가 입국 시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공항과 항만에 난민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신청건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난민, 난민 인정 심사를 기다리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지원하고 있었다. 동 센터의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은 82명이었다.

법에 의해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난민 신청자는 정부에 통역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적응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난민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난민 신청은 꾸준히 증가했다. 1994년 이래로 4만 명 이상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그 중 절반만이 인정 심사를 받았으며 난민 지위를 획득한 비율은 약 3 퍼센트였다. 1월부터 11월까지 1만 638 명이 난민 신청을 제출했다. 같은 기간 동안 예멘인 400여 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했으며 그 중 339 명이 1년간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획득했고 34명은 체류 허가가 거부됐으며 85명은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 법무부는 상당수 신청자가 필수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민 지위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정부기구들은 업무 인력 부족이 증가하는 난민 및 망명 신청건의 처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7월 현재 전국 10개 사무소에 겨우 39명의 심사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안전한 출신국가/경유국: 법률은 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자에게 난민 심사 불회부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박해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한 출신국가나 안전한 제 3국”으로부터 온 경우가 포함된다.

기초생활보장지원: 문화적·언어적·사회적 차이로 인해 이주민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수의 북한 출신 이주민들과 타국의 망명 신청자들은 사회적 차별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례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탈북자와 관련된 5 건의 진정이 접수됐으며 그 중 3 건은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2 건은 심의가 진행 중이었다.

법무부는 1994~2017 년에 내륙체류기간이 포함된 30 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여 982 명의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1~5 월에 예멘인 난민 신청자 552 명이 제주도로 입국하면서 출입국 관리 인력에 부담이 가증됐으며 비판적인 여론이 촉발됐다. 이로 인해 6 월 1 일부터 예멘인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 및 내륙 체류가 금지됐다. 예멘인 난민 신청자의 급증에 대응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정부는 취업 허가까지 통상 6 개월이 경과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예멘인 난민 신청자의 취업을 허용했다. 9 월을 기준으로 약 200 명의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제주도 내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나머지는 농업과 어업 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보고됐다.

항구적 해결책: 7 월에 법무부는 지금까지 버마 난민 약 86 명의 국내 재정착을 지원한 2 개년(2015~17 년) 재정착난민제도 시범사업을 2 년 더 연장했다. 법무부는 2018 년부터 2019 년까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에 등록된 버마 난민을 최대 120 명까지 말레이시아로부터 받아들일 계획이었다.

임시 보호: 정부 지침은 ‘난민’ 자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생명이나 개인의 자유가 고문으로 인해 위협을 받거나 중대한 위협에 처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부가 임시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무국적자

2017 년을 기준으로 168 명의 무국적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탈북자의 자녀로 태어난 아동의 경우 불법체류자거나 무국적자 신분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결국에는 국적을 취득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정식 탈북자에게 부여되는 금전적 지원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 탈북자는 무국적자 자녀를 중국에 남겨 두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이들은 가혹행위와 착취에 특히 취약하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본국 추방을 두려워한 나머지 관공서나 자국 대사관에 자녀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7 년에, 국내 비정부기구의 한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2,000~3,000 명의 무국적 아동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제 3 절.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법률은 비밀투표로 치러지고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에 기초한 자유롭고 공정한 정기적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직권 남용, 인권 침해 혐의를 규명할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2017 년 6 월에 설치한 특별위원회는 11 월에 세월호 사건을 포함하여 15 개 사건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2017 년 말에 특별위원회는 검찰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포함하여 54 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에 남 전 원장은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며 11 월 16 일에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선거 및 정치 참여

최근 선거: 2017년 5월 대선과 2018년 6월 지방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대선은 조기에 실시됐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득표율 41.1 퍼센트로 최다 득표로 당선되었다. 2018년 6월에 열린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개를 석권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정당과 정치 참여: 개인이 포털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할 경우 가명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가오는 선거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명을 써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견해 표현과 정보 전달 그리고 선거운동 지원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선거법 조항과 후보자비방 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여성과 소수자의 참여: 여성이나 소수자의 투표, 공직 선거 출마, 선거 감시, 기타 정치 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은 그런 활동을 했다.

제 4 절. 부패 및 정부의 투명성 부족

법률은 공직자 부패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정부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을 토대로 관련 법률을 전반적으로 효과적으로 시행했다.

다만, 간혹 부패에 연루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는 경우들이 있었으며 당해 연도 중에 다수의 공직자 부패 사건이 보고됐다.

부패: 8 월에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를 확정했으며 형량을 징역 25 년과 벌금 200 억 원(1,780 만 달러)으로 상향했다. 4 월 6 일에 제 1 심 법원은 부패,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24 년과 벌금 180 억 원(1,610 만 달러)을 선고한 바 있었다. 제 1 심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하여 삼성과 롯데 등의 대기업이 최씨가 운영하던 미르 재단과 K 스포츠 재단에 774 억 원(6,900 만 달러)을 기부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에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4 월에 검찰은 여러 건의 부패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과 삼성으로부터 110 억 원(981 만 달러)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 월에 뇌물혐의로 징역 2 년 6 개월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익을 목표로 설립된 K 스포츠 재단에 70 억 원(624 만 달러)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재산 공개: 선출직을 포함하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 형성 과정을 포함하여 본인의 재산과 수입을 공개해야 한다. 재산 공개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8,92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 월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1,171 명의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1명은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허위로 신고한 31 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 5 절.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권 침해 의혹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국내외 각종 인권단체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제약 없이 활동했으며,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인권단체의 의견에 다소 협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함에 따라 탈북자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대북 비판을 자제하라는 직간접적인 압력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20 년간 계속돼온 탈북자동지회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17 년 12 월에 중단되고 경찰이 대북 풍선 전단 살포를 저지했으며 경찰이 탈북자 단체를 방문하여 재무 및 기타 행정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것 등이 그 예였다.

정부 인권기구: 헌법에 명시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독립 기관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행권이 없으며 위원회의 권고 및 결정 사항 역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사항을 조사하고 정책을 권고하며 일선 공직자들을 교육하고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더 많이 채택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년 5 월 10 일부터 2018 년 6 월 30 일까지 인권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정부 부처에 총 32 건의 권고사항을 전달했으며 그 중 9 건이 직접 채택되고 나머지 23 건은 추가 검토를 거쳐 채택됐다고 확인했다. 경찰청 내에는 인권 단체 대표 6 명을 포함하여 위원 9 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다.

옴부즈만실은 독립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옴부즈만실은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 등 여러 정부 기관들과 협조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법률에 의해 설립이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지체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탈북자 단체들은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을 꺼린 것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대사직이 1년 넘게 공석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제 6 절.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여성

강간 및 가정폭력: 법률은 강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부부 강간을 불법으로 규정한 구체적인 법령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강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법률은 강간죄를 폭행이 수반되는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은 가정 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여 당국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금지 명령을 6개월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접근 금지 명령은 최장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6,24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접근 금지 명령에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1만 78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기소유예 또는 교정 치료 및 상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위험이 있고 즉각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률은 직권에 의해, 혹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본 명령에 의해 가해자에게 주거 퇴거 혹은 100 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통신 장비를 통해 피해자를 접촉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법률은 법원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성범죄자 재범자를 대상으로 약물 치료를 통해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증가 추세에 있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법무부는 1월부터 7월 사이에 20 건의 화학적 거세가 실시됐다고 보고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으며 사법제도는 효과적으로 법률을 시행했다. 하지만 강간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명예훼손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강간 관련 법률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3월에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였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합의의 부재가 아닌 “폭행 수단”을 근거로 성폭행을 정의, 국민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8월에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신체적 폭행이나 폭언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했다.

가정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며 미신고율이 높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성폭력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성폭력 사건의 65 퍼센트가 직장 내 상사나 고용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한 해 동안 전체 가구의 14.2 퍼센트에서 ‘배우자 폭력’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10 월에는 부산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그녀와 부모 그리고 84 세 조모를 무참하게 구타하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범행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투 운동에 대응하여 여성가족부는 3 월에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했다. 11 월을 기준으로 특별신고센터에 1,271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017년 2 월에 한 여성 검사가 남성 검사로부터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자 한국여성의전화(한국 최대의 여성 상담 센터)는 그 해에 전화 상담 건수가 23.5 퍼센트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같은 해,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폭력 869 건과 가정폭력 827 건을 포함하여 총 2 만 9037 건의 상담을 지원했다.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의 전국 38 개 통합지원센터와 104 개 소규모 상담소에 예산을 지원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담, 의료 지원 및 치료, 사회복지사,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8 월에 여성가족부는 2 차 세계대전 ‘위안부’(성착취를 목적으로 매매된 여성)와 관련된 연구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설립했다. 2015 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시민단체와 생존자 모임이 거세게 항의하고 외교부 청사 앞에서 9 월에 집회가 열리는 등 1 년 내내 논란이 이어졌다. 2015 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10 억 엔 (약 910 만 달러)을 출연하여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은 당해 연도 중에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해산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11 월 21 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협상에 응하지도, 남은 재단 기금 약 460 만 달러를 반환하지도 않겠다고 발표했다.

성희롱: 법률은 회사와 기관들이 성희롱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성희롱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행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 경찰청에서는 성희롱을 ‘상대방이 원치 않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성희롱은 중요한 사회 문제로, 1년 내내 언론에 다수의 성희롱 사건이 보도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에 성차별시정팀을 신설했다.

2월에는 다수의 여성이 유명 극작가 이운택으로부터 성폭행을 포함한 성희롱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이씨는 직책을 사퇴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

강압적 산아 제한: 강압적 낙태나 비자발적 불임 시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차별: 여성은 헌법에 의해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법률은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의 경우 남녀간 급여 차이는 34.6 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

출생신고: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생 시점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여야 한다. 관계 당국은 태생이 불분명하거나 태아가 무국적자의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 법률은 모든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호적에 올리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출생 후 1 주일 이내에는 입양을 금하고 있다.

아동 학대: 법률은 아동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반복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에 보건복지부는 확인된 아동학대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했다. 2017년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3만 4185 건이었으며 2016년에는 2만 9669 건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계도 캠페인의 확대와 아동 복지 신고 요건의 확대가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3월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은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피해자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아동보호시설과 쉼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가정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아동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운영되는 온라인 상담센터를 운영했다.

8월에 언론은 한 여성 보육교사가 아동학대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다른 보육교사 2명은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보육교사가 8명의 아동을 총 25회에 걸쳐 학대했으며 이불을 덮어쓰워 숨을 못 쉬게 한 것이 원인이 되어 한 명이 질식사 했다고 발표했다.

조혼 및 강제결혼: 법률상의 혼인가능연령은 남녀 모두 18세이다. 강제결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아동 성착취: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은 13 세이다. 19 세 미만의 청소년과 위계·위력에 의해 성관계를 맺는 것은 불법이다. 13 세 미만 아동 강간죄는 10 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며 13 세 이상 19 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죄는 5 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여타 처벌수단으로는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성충동 약물치료 등이 있다. 법률은 아동 음란물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 음란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생산 또는 소지하는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000 만 원 (1 만 780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그 중에서도 특히 가출한 소녀는 온라인을 통한 성적 인신매매와 상업적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국제아동탈취: 한국은 ‘1980 년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당사국이다. 국무부 「부모에 의한 자녀 국제 납치에 관한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on International Parental Child Abduction)」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International-Parental-ChildAbduction/for-providers/legal-reports-and-data.html>) 참조.

반유대주의

유태계 주민 수는 약 1,000 명이며,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거주자이다. 반유대주의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

인신매매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www.state.gov/j/tip/rls/tiprpt/) 참조.

장애인

법률은 신체, 감각, 지적, 정신 장애를 가진 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고의적인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2 만 6800 달러)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찰 조사시 장애인 본인과 가족을 전담하는 검·경 특별 태스크포스가 설치되었다.

정부는 또한 건물, 정보, 통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과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장은 계속해서 해당 법률을 무시했으며 구조 변경에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벌금 납부를 선택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적장애인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성인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했고 장애인 가정에 대한 공적 지원이 부족했다고 보고했다.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에게 계좌 개설을 거부한 은행을 상대로 5 월에 장애인차별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 월에 열린 동계 패럴림픽 개·폐회식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 월에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1,200건의 장애인 차별 진정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 및 민간 건물과 시설의 장애인 친화적 접근을 권장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장애인 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7월에 강원도에 위치한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여학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보고했다. 3월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서울의 한 야구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지적장애인 남성이 17년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개 권역별 재활병원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를 운영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1~6급으로 구분되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수당 수급 자격을 판정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다수의 시민단체가 이 제도를 불공정하고 비인도적이라고 판단했으며 폐지를 촉구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대상자로 등록된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제도를 계속 시행했다.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이상의 저소득 경증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 아동은 3~17세 아동을 위한 공립특수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공·사립 학교, 어린이집, 교육시설, 교육기관은 장애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기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소수 국민/인종/민족

국민 대부분이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인구 약 5,140 만명의 한국에는 7 월을 기준으로 230 만명 (33 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 포함)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는 종합적인 차별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소수 민족/인종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일상적으로 존재하지만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있다. 이주민과 귀화인의 상당수가 여성 배우자였으며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 진정 사건의 대부분이 강제 추방 혹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보호소에 구금된 동안 발생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일부 이주민 가정 아동들이 차별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자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외국인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 역시 외모로 인한 따돌림을 경험했다.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신부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소수 민족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여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주노동자, 배우자,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인한 폭력 행위, 차별, 기타 가혹행위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를 차별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나, 성적지향을 근거로 차별이나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을 규정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한 차별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은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군 형법의 ‘추행’ 조항은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애 성관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에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1월까지 군 형법의 ‘추행’ 조항을 근거로 새로 제기된 사건은 전무했다. 2017년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라는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받은 병사 44명 가운데 22명이 기소됐으며 17건의 사건이 종결됐고 나머지 5명은 군사재판이 계류 중이다.

HIV 및 에이즈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

법률은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이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하지만 국내 시민단체들은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이 사회적 차별과 낙인으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에게 HIV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2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영어 교사에게 HIV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2017년 7월에 폐지됐다.

제 7 절. 근로자의 권리

a.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법률은 근로자가 독립적인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엄격한 제한범위 내의 쟁의권, 단체교섭권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교사에게는 일정한 제약이 가해진다.

법률은 근로자의 쟁의권을 인정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 근로자는 쟁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로 규정되는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 항공, 통신, 수도, 병원이 포함된다. 노조법은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노동쟁의’에 관련된 당사자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제 3자 조정을 거치거나 노사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조합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개시하는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 법률은 ‘노동쟁의’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력감축이나 정리해고 등 경영권에 관련된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임금, 복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구체적인 연관성이 없는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으로 간주되는 파업에 참가할 경우 주도자와 참가자는 죄목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은 노조 지도자가 노조 업무에 투입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노조의 자체적인 조직 관리를 제한하는 일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당 가입이나 정당 또는 공직 선거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등 교육 근로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로 인해, 조합의 입장을 옹호하는데에 제한이 있다. 또한, 동법은 해고된 근로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법률은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노조원을 차별한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한 보복을 금하고 있다. 노조들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과 단체교섭 참가자에 대한 까다로운 등록 요건으로 인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사실상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적법한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과 관련된 법률의 시행을 전반적으로 보장했다. 사업주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에 추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자 복직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률은 노조의 합법적인 교섭 요구를 거절하는 사업주를 벌금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노동 관련 단체들은 대체로 정부의 간섭 없이 운영된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은 정부가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파업을 억제할 목적으로 형사 처벌을 비롯한 극단적인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업무방해죄’ 등 과도하게 광범위한 형사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행위와 관련된 혐의로 2년간 복역한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5월에 가석방됐다. 한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5만 5000원(495달러)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446달러)으로 감형됐으며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6월에는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역시 6개월 구속 수감을 마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회사측에 의한 반노조 행위의 예로 사측의 지원을 받는 노조의 결성 장려, 조합원에 대한 감시, 위협, 부당한 압력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노조 와해 시도, 고용주의 특정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 하도급계약과 조합원 해고, 파업에 참가한 노조 지도자 및 조합원 해고, 노조 지도자의 의욕을 꺾기 위한 한직 발령 등을 들었다. 특별보고관은 사용자가 노조의 권리를 용이하게 잠식하는 방법을 자문받기 위해 노무법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들은 체포와 추방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 노조 활동 참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8 월을 기준으로 약 1,400 명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지만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조원의 수는 400 명에 불과하다고 확인했다.

b. 강제노동 또는 의무 노동의 금지

법률은 모든 형태의 강제 혹은 의무 노동을 금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기록이 남아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17 년의 경우 강제노동으로 기소된 사례는 전무했다. 법률은 강제노동을 강요한 자를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정부기구들은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특히 수천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부채노예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기만적인 채용 관행, 불법 여권 압수, 임금 체불 등 강제노동의 징후를 보이는 근로 조건에 처해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주들 사이에서 여권을 빼앗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그러한 행위가 ‘드물다’고 보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이주노동자 센터들은 불법으로 여권을 빼앗는 행위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수 이주노동자는 계속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여권을 비롯한 다른 형태의 신분증을 대신 보관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여권 압수와 관련된 다수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www.state.gov/j/tip/rls/tiprpt/) 참조.

c. 아동 노동 금지 및 취업 최저 연령

법률은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15 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한다. 중학교까지(약 15 세)는 의무교육이므로 정규직 고용을 위한 취직인허증은 거의 발급되지 않았다. 18 세 미만 청소년이 취업을 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이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업종의 고용주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단속과 처벌은 전반적으로 법률의 준수를 보장하기에 충분했다. 정부는 기록이 남아 있는 가장 마지막 연도인 2017 년에 2 건의 아동노동 관련 법률 위반 사례를 보고했다.

아동이 상업적인 성적 착취에 동원된다는 보고가 있었다(제 6 절 ‘아동’ 참조).

d. 고용 및 직업과 관련된 차별

법률은 고용이나 직업의 차별을 금하고 있다. 언어나 HIV 혹은 기타 전염성 질환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법률은 동일가치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제 6 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은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경력 단절 예방,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촉진 등 3 개항으로 구성된 여성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 관련 법률은 전반적으로 이주 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지만 정부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

법률은 비공식 근로자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며 급여 등 혜택 수준이 정규직보다 낮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2 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집행하는 종합적인 제도는 없었다. 1 월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차별 사업장 227 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7 월을 기준으로 직장 내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괴롭힘, 가혹행위, 따돌림이 있었다는 신고가 보건복지부에 3 건 접수됐다.

HIV/AIDS 감염자,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를 상대로 차별이 있었다.

직장 내에서의 여성 차별은 여전했다. 평균적으로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의 63 퍼센트에 불과했으며 저임금 저숙련 계약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여권 신장 단체인 우먼스링크에서 여성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 퍼센트가 한국은 성평등 국가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OECD 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 퍼센트였다. 여성은 출산 후 직장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7 월을 기준으로 500 대 기업 10 곳 중 약 7 곳은 여성 임원이 한명도 없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업종에 따라 응답 여성의 3.6~27.5 퍼센트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비용은 4 조 7000 억 원 (41 억 9000 만 달러)에 달했다. 6 월에는 시중은행 3 곳의 관계자 38 명이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감독원이 4 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신한은행, KB 국민은행, KEB 하나은행이 채용 서류를 조작하여 남성 지원자를 여성 지원자보다 의도적으로 우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소의 원인을 제공했다.

상당수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차별에 직면해 있다. 6 월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 수가 52 만 150 명이라고 보고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최장 체재 허용 기간은 4 년 10 개월로 이는 영주권 신청에 요구되는 5 년에 약간 못 미치는 기간이다. 비정부기구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규정이 외국인근로자의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 자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의 2015/16 년도 보고서는 고용허가제하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착취나 가혹행위를 당하더라도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제 7.b 절 및 제 7.e 절 참조). 비정부기구들은 당해 연도 중에 그러한 노동자들이 직장을 옮기는 것이 여전히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비정부기구들은 2016 년에 농촌 지역 여성 이주노동자의 12.4 퍼센트가 성폭력을 경험했으나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0 퍼센트에 불과했다고 보고했다. 2017 년 11 월에는 경기도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는 고용주에게 저항하던 여성 이주노동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청 근로자(“파견 근로자”로 불린다)와 임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별적인 근로 조건에 직면해있다. 비정부기구들과 현지 언론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그들의 고용상태로 인해 차별의 위험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8월을 기준으로 공공부문 근로자 6만 8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e. 용인가능한 최저 근로 조건

당해 연도 중에 최저임금은 7,350 원 (6.56 달러)에서 8,350 원 (7.45 달러)으로 인상됐다. 2월에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법률은 2주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특정한 날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특정한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근무제의 시행을 허용했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 근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수출가공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주 1일 휴가 규정 등의 근로 기준이 면제된다. 법률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근로자의 주간 시간외 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직업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기업들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 법률에 의해 근로자는 고용상의 위협없이 위험한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기준은 농업, 어업, 광업을 포함하여 모든 산업 부문에 적용된다.

정부는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임금 및 용인되는 근로 조건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또한, 정부는 사업장 내 사고를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설업 부문을 중심으로 매년 3,000 곳 이상의 사업장을 조사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부족하며 불시 조사가 거의 실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동단체들 역시 노동법 위반 가능성을 파악하는 현장 조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시간외 근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처벌에는 징역과 벌금이 포함되어 있다.

일련의 규정들이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 대상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고용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특정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고 이직이 제한되지만 대부분이 노동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계약직·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노동인구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전자·자동차·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직장을 옮기는데에 있어 다수의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일자리를 잃고 3개월 내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 만약 이주노동자가 3개월 내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당국은 해당자의 취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농업 또는 건설 근로자 같은 계절 근로자들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직을 원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어느 회사가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직이 어렵다. 이주노동자는

최장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한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3개월 후에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규정 위반을 예방할 목적으로 처음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취업 전 교육을, 이직 근로자에게는 사업장 적응 교육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15개 언어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어 및 문화 강좌 프로그램, 쉼터, 무상 의료서비스를 운영하는 콜센터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42곳의 예산을 지원했다. 4개 부처(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기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출입국, 복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10곳을 공동으로 설립했다.

법률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이주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이주노동자는 출국 전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고했으며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은행 규정이나 지급을 지연하는 고용주로 인해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비정부기구들은 출국하는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비정부기구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근로 시간을 단축하거나 불법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저지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고했다.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이주노동자 수가 많은 농업, 축산업, 어업의 경우 법률이 근무시간, 공휴일, 수당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착취에 취약하다고 보고했다. 다른 비정부기구들은 외국인근로자가 현지 근로자와 비교하여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라는 형태로 사용자로부터 신체적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했다. 비정부기구들은 이주노동자 상황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했으며 개선되지 않은 현실에 우려를 표명했다.

비정부기구들은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등의 가건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용주는 규정을 회피하여 플라스틱 판넬로 제작된 열악한 숙소를 제공했다고 보고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에 8만 9848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사망자 수는 1,957명으로 2016년과 비교하여 10.1 퍼센트 증가한 수치였다. 일례로, 2017년 1월에는 질소 가스에 노출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근로자 4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기업인 포스코는 안전 관련 예산을 2 배로 증액하고 안전 조치를 개선하는 사업에 3년간 1조 1000억원(9억 8100만 달러)을 투자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가 산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고 작업장 내 근로자 수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긴급 구조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항제철소장을 포함하여 관련자를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6월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송했다. 포항제철소는 벌금 1,000만 원(8,920달러)을 선고받았다.